

# 질문지만 200쪽 이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집중조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구속 수사 의지를 밝힌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발 삼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할 방침이다.

◇'尹,문부수괴의원 끌어내려지시' 핵심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의 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봉쇄를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군지휘관들에게 분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지시했다는 군 수뇌부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 시간대별 행적과 지시 사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지시하고,

## 공수처, 48시간내 '내란수괴' 입증 총력...구속영장 기반 다지기 정치인 체포, 국회·선관위 봉쇄 지시 혐의...계엄당일 행적 추궁 '불법계엄' 모의 정황 집중...계엄요건 위반·위헌 포고령 혐의도

특전사령관에게 '문짜'를 도끼로 부수고 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윤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신설하려 했다는 의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추

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연초부터 '비상조치권' 언급'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 고수들의 최측근 인사들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관저, 안가 등지에서 이른바 '총입파'(윤 대통령 모교인 총암고 출신)로 불리는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 등을 최소 6차례 이상 만났고, '비상대결'을 통해 헤어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계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국회·정당 정치 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 검토를 거쳐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공표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계엄 요건' 무시하고 선포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를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이유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특검·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와 출석 국무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등 절차를 위반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안전을 알려주지 않았고 정족수를 채우자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저항 없이尹체포에 길 터준 경호처...경찰 '심리전' 먹혔다

## 영장 집행 저지 경호요원 없어...내부 대기하거나 휴가 써 강경파 여론전은 '실패'...경찰,분열 감지 후 "협조는 선처"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인간 방패'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장면과 극명히 대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이날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호처 요원들의 저항을 맞닥뜨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교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를 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실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지휘부는 무력 사용을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호관들에게 '불법 영장 집행'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전'에 수차례 나섰지만 일부 경호관을 제외하고는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집행은 막으면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경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 안전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간 우려됐던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배경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전에 벌어진 '심리전'이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경호처 내 '온건파'로 꼽혔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을 토대로 경호처 내 분열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후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저지하는 직원은 현행범 체포된 뒤 복속의 경찰서로 부산 호송해 조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례적으로 작전 계획을 공개하며 '경호처 벽'을 사전에 허문다는 전략이었다.

공수처도 관저에 진입하면서 문 앞에 "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관까지 세우는 등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 경찰관들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체포 20분만에 공수처로...포토라인엔 안서

## 경호차량 이용·체포장면 노출 안돼 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0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는 15일 오전 10시33분께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건물 뒤쪽 출입구의 가림막 시설 앞에 주차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입 제한이 없는 앞쪽 문으로 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포토라인을 설치해두기도 했으나

협의 끝에 건물 뒤쪽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피의자가 원하면 이 출입구를 통해 이른 노출 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왔다. 편의상 '뒷문'으로 불리지만 뒤쪽에 있는 문이 정문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집행에 앞서 공수처 관계자와 변호인단이 1시간여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 상황을 고려한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등 여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이 관저 내부에서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체포 장면이나 호송을 위한 경호처 차량 탑승 장면은 따로 노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尹 "불법 수사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출석"

##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에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시키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감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연합뉴스

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감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연합뉴스

# 롤러코스터 같았던 '7시간 체포작전'

## 사다리·절단기 투입 진입 순조...협상 끝 오전 10시33분 체포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7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까지 거론되는 상태에서 최대 2박3일 장기전을 준비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우려됐던 충돌이나 극렬 저항 등 돌발 사태도 없었다.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던 '체포작전'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부터 시작됐다.

밤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지킨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가자가 6천여명에 달한 만큼, 경찰은 기동대 54개 부대·3천200여명을 투입해 현장관리를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지나 경찰이 확보한 경로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들어왔다. 이들은 체포·수색영장을 쥐고 관저 앞에 도착했다. 영장에 적힌 작전 장소

는 관저·사저·안전 가옥이었다. 체포 작전 시작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10분께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협조를 구했지만,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에게 가로막혔다. 이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주변 시위대가 몰려들어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집행 초반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교착 상태는 '공성 병기'가 투입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오전 7시께부터 경찰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를 보급했다. 오전 7시30분께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출입문을 넘는 데 성



공했다. 물꼬가 트인 이후에는 '파죽지세'처럼 집행 인력들이 관저 내부를 빠르게 장악해나갔다. 오전 7시33분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7시48분 2차 저지선을 우회했다. 7시57분 철문과 차벽이 쳐진 3차 저지선 앞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비

서실장과 함께 관저 내부로 들어가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상에 돌입했다.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께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에 탑승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 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조사...尹, 녹화 거부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층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가 거절해 영상 녹화는 진행하지 않는 결론이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상 조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영상녹화 장비가 마련된

영상조사실에 추가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2017년 조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녹화하지 않았다. /연합뉴스